시 론

오 창 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4차 산업혁명시대, 게임의 재발견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중독 및 게임장애를 정신건강 질병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하겠다고 지난 12월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토 끝에 이번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총회(WHA) 안건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게임 태동기부터 시작되어 온 해묵은 논쟁이다. 게임이 갖는 몰입성, 사행성,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부각해서 나타나는 문제로 게임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몰입(addiction)과 중독(intoxication)을 구분하고,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같은 공존질병에 대한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게임에 대한 인식은 극단적인 경향을 보인다. 교육열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게임에 대한 규제안이 발의되다가 2011년부터 미성년자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은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게임을 유해물로 지정한 것이다.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면 공부를 안 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게임을 청소년만의 문화로 격하하고 게임을 즐기는 것을 게임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게임〉메신저〉뉴스 순이며, 전체 스마트폰 보유자의 55%가 한 달에 25.3시간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을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은 30대로 게임 주이용 계층이 변화되어 더 이상 교육적 효과를 빌미로 게임을 강제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때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게임은 더욱 중요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년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수출액은 37억 7천만달러로 전체 콘텐츠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수출 효자 종목으로 알려진 K팝과 비교해 7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지난해 게임 산업 일자리가 10% 넘게 늘어났지만 반면 제조업은 0.3% 줄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게임은 더 이상 청소년이 즐기는 오락이 아니다. 게임을 더 이상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게임 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서의 순기능을 본다면 부정적인 인식의 틀을 깰 수 있다. 그동안 규제산업으로 치부되어왔던 게임 산업은 오히려 창의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게임의 긍정적인 가치를 활용하여 창작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게임이 가진 몰입과 흥미라는 순기능을 교육, 의료, 관광 등 타 산업분야와 융합하는 것으로, 재미없고 딱딱한 지식을 유연하게 전달하고 몰입을 통해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최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여수 관광을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미스테리 트레일'을 출시하며 관광산업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먹거리 위주의 단순관람형 관광이 아닌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정보를 게임을 통해 전달하고 주요관광지 위주가 아닌 숨어있는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게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관광자원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는 게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나주에 전남글로벌게임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체감형 게임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게임을 여러 산업에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 매개로 접근하고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변한다. 이제는 게임이 '좋다 나쁘다'는 식의 비생산적 이분법적 사고와 중독의 원인이나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차원에서 접근과 육성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활용방안을 찾을 때이다.

현장칼럼

김 남 균
광주시 도로과장

똑똑해지는 LED가로등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18세기 중반에 발생했던 제1차 산업 혁명은 기존 농경사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공업 사회로의 전환을 일으켰던 기계화 문명의 시작이었다. 이후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던 제2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 사회의 제3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혁명'이란 단어가 가진 뉘앙스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이 피부로 크게 와 닿지 않겠지만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 나 'IoT@home', '우리집AI'와 같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초연결과 초지능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되었다.

초연결과 초지능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결을 위한 매개체가 필요하다. 우리 주위 곳곳에 있고, 사회 기반 시설이면서 공공재인 '것'에 운영해보고 검증해 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연구개발자 중심의 시범 실증 차원이 아닌 실제 사용자가 거주하는 공간이 곧 실험실이 되는 리빙랩(Living Lab)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사용자가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가로등은 단순히 어두운 도로를 비추는 공공재가 아니라 미래 스마트시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가로등에 통신 속성을 부여하여 소비전력 측정, 위치, 실시간 고장 여부 파악, 능동 밝기 제어가 가능한 LED가로등을 LA에서 시범 적용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영국 런던에서는 IoT LED 가로등 28,0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음향, 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를 서로 전달하여 도시 내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교통, 주차, 소음 및 대기질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로등에 각종 센서들과 결합하여 스스로 밝기를 조절하고, 수집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 확장 계획 수립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범죄예방설계(CPTED)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등에 긴급구조요청 기능 등을 추가하여 시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기술개발 및 적용 사례에 머물러 있어 도시 내 문제 해결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6년 4월부터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확대해 나감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골목길, 학교·학원 주변가,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 스마트 가로등 총 3,370개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빛고을 스마트 가로등'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긴급구조 요청이 이루어지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시민 보호 정책을 이룬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광기술원 등 광주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스마트 LED 가로등을 이용하여 교통사고율 저감, 시민 안전 및 도시 정보, 미래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시티용 도시 인프라 플랫폼 등을 달성하기 위한 ICT 및 안전 기술이 융합된 미래 인공지능형 도로조명 선도 도시로 가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고다발구간 및 주요도로에 설치된 ICT 기반 IoT LED 가로등을 매개체로 하여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수집하고 도로상황을 분석하여 주행 중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며, 시내 주요구간에 설치·운영하는 리빙랩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고 주체가 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족 국가 시대 때부터 마을 또는 절 입구에서 지역 간의 경계표, 이정표 기능을 하는 동시에 잡귀를 내쫓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장승이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시민들이 거주 및 생활하는 공간 지근에서 어둠을 밝혀주면서 이웃 간 교류의 장이 되고 범죄·교통사고로부터 스스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똑똑한 LED가로등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현장칼럼

이 은 혜
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아름다운 벚꽃엔딩, 그 끝은 투표 참여

장미대선이라 별칭으로 불리던 작년 대통령선거가 끝난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간다. 봄철에 공직선거가 모두 치러지게 되었기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위원회의 모토가 운명처럼 느껴진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맞는 말이다. 어떤 나라가 '바람직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척도는 그 나라의 선거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선거(투표)가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어 누가 당선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전에 예측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법치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정권(대표자)을 바꾸는 방법은 사실상 선거제도 밖에 없다. 우리는 작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련의 사태를 폭력 등 불법행위 없이 선거라는 제도화된 방법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했다.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성숙한 시민의식, 그에 기반한 선거참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제도적으로 발전된 선거환경 또한 조력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었다. 사전투표기간에는 전국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아파트 선거의 경우에는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투표소에 가지도 않고 집에서, 사무실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도 높아지고,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선거환경이 너무나 놀랍도록 변모했다.

하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금품선거다. 물론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사라졌으나 여전히 금품선거가 존재하고 있다. 아직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했다는 기사를 여전히 보고 있다.

금품선거가 왜 나쁜가? 선물을 주고, 밥을 사주고, 관광을 보내주면 그 결과는 뻔하다. 선거를 치르나 마나하다는 주변의 자조섞인 이야기도 들린다. 돈 또는 선물 등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90%이상이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결과를 오래 전에 본 적이 있다. 이 여론조사는 왜 금품선거가 사라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이제 흐드러지게 폈던 벚꽃은 졌다.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면 벚꽃은 내년도 그 이후에도 계속 아름답게 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핀 민주주의라는 꽃은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야속하게도 내일이면 시들어 버린다. 한번 시든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피게 하기 위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금품이나 학연·지연·혈연이 아닌 정책이나 비전, 인물 됨됨이를 살펴보고 후보자를 선택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러 다가오면, "정책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요?"라고 묻고 "그 정책이 실제 실현가능한가요?"라고 되물어 조금이나마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지역을 위해 도움이 될 대표자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벚꽃엔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름다운 모습을 내년에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이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그 화려함을 찍을 마지막 정점은 바로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그날 스마트한 동구민의 품격있는 권리행사를 기대해본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社 說

추경예산으로 막힌 청년일자리 해소 기대

드루킹 특검 등 현안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3조8천여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1일 통과시켰다.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218억원 순감된 3조8천317억원 규모다.

정부 제출안에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 등이 삭감되고, 감액된 금액은 목포·영암·군산·거제·통영 등 고용위기를 겪는 지역을 살리는 예산으로 많이 증액됐다.

이번 최종 의결된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비로 광주 159억원, 전남 921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지역과 관련한 현안예산은 모두 24건에 921억원을 확보했다. 분야별로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00억원, 희망 근로 지원 19억원,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 1억원 등이 반영됐다. 조선업 불황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는 목포시와 영암군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대형요트 개발 49억원, 지역 투자촉진 37억원, 항만시설 유지 보수 36억원,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20억원,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 14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또 광주-완도(1단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남해안 철도 건설 1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100억원, 항구적 가뭄대책 해소를 위한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영산강Ⅲ지구) 80억원 등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일자리 사업 등 모두 11건에 159억900만원을 확보했다. 분야별로 일자리 사업 8건에 31억6천만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억4천만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설 100억원,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2억원 등이다.

일자리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마을기업 청년참여자 인건비 지원 3억6천만원, 청년창업&청년취업 윈윈 프로젝트 6억7천500만원, 청년드림 13억1천만원, 청년과 더불어 일자리 지원 3억원, 마을청년활동가 사업 1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로 청년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부진한 지역 청년고용률이 대거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전두환씨 떳떳하다면 광주에서 재판받아야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조 신부가 1980년 5월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회고록에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전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이다. 그러나 전씨 변호인은 지난 21일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재판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전 씨 측은 이송 사유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기 전 같은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는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전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한 뒤 모두 불응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로 볼 때 전씨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씨가 진정으로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다면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게 도리이다. 5·18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전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광주 법정에 서기를 회피하려는 태도야말로 파렴치한 모습이다.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머지 않아 최초 발포 명령자 등 베일에 가려진 진실이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그래픽 뉴스

"사회 의사결정, '노력'보다 '압력·백'에 좌우된다"

한국 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외부 압력이나 백,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좌우된다는 국민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3천839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절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외부 압력이나 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는 3.99점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점수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뒤에서 받쳐주는 세력이나 사람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된다는 데 대한 동의 점수는 '다소 그렇다'에 가까운 것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3.80점),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3.68점) 등의 항목도 동의 경향이 높았다. 이밖에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다'(3.55점),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3.45점),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는다'(3.43점) 등도 3점(보통이다) 이상을 얻어 절차상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살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려면 불안 요소에 대한 직접적 개입 외에도 사회구조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며 "사회가 부패했으며 분배 결과 및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